

지방자치 정책브리프

외교부-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국민외교 추진이 필요하다

외교 정책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중요성

- 2018년 3월 발표된 「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」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 가치는 ‘국민이 주인인 정부’라고 밝히고 있으며, ‘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’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
- 지금까지 외교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국가대 국가로 이루어져왔으나, 민주주의 성숙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및 시민 참여에 기반한 열린 정부 구현 추세 확산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외교 정책 참여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
- 국민외교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로서,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절차적·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합의를 근간으로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임
- 국민외교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외교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민 외교의 저변 확대가 필수적임

국민외교 현황 및 과제

현황

- 현재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외교 프로그램은 국민소통 강화, 국민참여 확대, 국민외교 역량 제고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
 - ① 국민소통 강화: 모바일앱, SNS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블로그 등) 등 온라인 소통 플랫폼, 국민외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, 오프라인 소통 공간 국민외교센터
 - ② 국민참여 확대: 국민외교 정책 제안 공모전, 국민참여사업, 국민외교 자유발언대
 - ③ 국민외교 역량 제고: 국민외교 공감 팩토리 시리즈, 국민외교 열린캠퍼스, 국민외교 디자인단

과제

- 외교부 및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낮은 관심, 전통적 외교정책의 특성으로 인한 국민 참여 경험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
- 국민들은 외교정책에 대하여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큼
- 외교정책에 대한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, 외교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예상하여 참여에 대한 의지가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하여 낮음
- 전통적으로 외교정책은 상대국가에 대한 정보 보안이 중요시되었으며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전략의 경우 자국민에게도 노출시키지 않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국민과의 유대감이 낮은 분야로 평가됨
- 외교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양한 지역의 국민들과 교류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

외교부-지자체 협력을 통한 국민외교 추진의 필요성

- 전통적으로 국제관계에 대한 고도화된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외교 분야는 국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필요성이 낮은 분야로 평가되어 왔음

※ 지방자치법 제11조(국가사무의 처리제한)

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외교, 국방, 사법,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

-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외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의견을 수렴 및 소통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, 국민과의 심리적·물리적 거리감을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
-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다 더 많은 국민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함
-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물리적·심리적 친숙함이 높으므로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주민참여 노하우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음
- 지방자치단체는 외교부에게 주민참여에 대한 정보, 노하우 및 실질적인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,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외교 전문성,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
- 외교부와 지자체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외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
- 그동안 국민외교 추진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외교 추진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한데 외교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측면을 활용할 수 있음
 -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추진 여부, 국제교류 전담조직 규모, 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함

외교부-지자체 협력을 통한 국민외교 추진 전략

-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외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외교 법·제도를 구축하고 지자체 제도 및 인프라를 활용해야 함

지자체 단위의 국민외교센터 운영 활성화

- 국민외교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소통을 원한다면, 국민외교 센터 운영의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자체로 한 단계 내려야 할 것임
- 지자체 단위에서 필요한 국민외교가 무엇인지, 지자체가 갖는 여러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외교적 아이디어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
 - 국민외교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의제(지역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사업,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국제교류 사업 등)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홍보함
 - 지자체가 국민외교와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, 외교부와의 협력 유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
 - 외교부의 예산과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더불어 기금이나 민간협력자금 등 자원 확보의 다각화 모색이 필요함

국민외교 법·제도 구축을 통한 외교부와 지자체의 역할 명확화

- 법·제도 구축 방안으로는 국민외교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규정, 외교 정보 및 공개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, 그리고 국민외교 친화도시 선정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호의존성 확대에 대한 논의 등이 제시될 수 있음
 - 「국민외교법」 제정을 통해 국민외교에 있어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
 - 외교부는 국민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별 국민외교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맞춤형 국민외교 실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
 - 지자체와의 협력에 있어서 정보 공유의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외교 정보 및 공개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
 - 국민외교 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외교부는 지자체에게 국민외교 관련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사례 발굴이 가능함

중앙정부-지자체 협력제도 및 지자체 인프라 활용

-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존 중앙정부-지자체 협력제도 및 지자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
-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-지자체 협업조직, 지자체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지역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며 민간 참여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
 - 중앙부처-지자체 협업조직(중앙-지방 국제교류 협의회, 지자체 국제업무 담당관 회의, 지자체 파견 국제관계 대사회의)을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음
 -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시설,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외교 참여 코너를 신설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
 - 지자체 미술관, 다문화 단체, 국제원조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국민외교에서 민간참여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함
 - 지역대학 내 (가칭) 지역 국민외교센터를 신설하여 외교부와 지자체의 컨택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

■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■



외교부-지자체 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방향

- 국민 외교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부-지자체 협력 사업의 전개방향을 준비기, 개척기 및 도약기, 고도화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
 - 준비기(1단계) : 외교부 국민외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국민외교 조직 신설을 고려함.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 참여 & 외사 활동 실태를 조사함
 - 개척 및 도약기(2단계) : 외교부 국민외교센터, 지자체 국민참여 및 국민외교 담당 조직의 협업을 강화함. 국민외교를 포함한 외사 활동 중 외교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필요한 활동을 분류하고,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및 콘텐츠 다변화를 유도함. 이러한 과정에서 외교부 국민외교 센터와 지자체 국민참여 담당 조직 간 유사·중복사업을 파악하고, 유사·중복 사업을 줄이는 대신 사업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함
 - 고도화단계(3단계) : 외교부와 지자체 협력을 공식화하고 외교부의 메타-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함. 이를 통해 국민외교 운영체계를 제고하고, 외교부의 국민참여 사업의 효과성을 확대함

▶ 내용문의 : 박재희(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, 033-769-9853, jpark@krila.re.kr)

▶ 지난호 :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, 전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살린다(신두섭 연구위원)

원문보기 ▶

✉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